

고성·양양까지 건축 열기 확산

생활권 같고 지가 상대적 낮아 투자자 발길

【속초】속초지역에서 일고 있는 대형 아파트, 호텔 등 건축 붐이 인근 고성·양양군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와 시·군에 따르면 속초지역의 경우 투자자들이 아파트, 호텔 건설 입지로 선호하는 해안가 등 토지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데다 지가도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으면서 생활권이 속초권인 고성군 토성면, 양양군 강현면 등을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속초시 조양동에는 양양군 강현면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건설 예정인 W건설이 건본주택을 개관하고 있다. 또 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도 고성군 토성면에 조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최근 속초시 조양동에 지상 2층 규모의 홍보관을 개설,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 밖에도 고성·양양지역에

는 해안가 경관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소규모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해 입지를 물색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한 투자신탁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동해안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세컨드 하우스 수요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속초를 중심으로 양양, 강릉 주문진 일대까지 많이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러시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모든 주민이 공유해 온동해안의 솔 숲길과 산, 바다, 호수 등 빼어난 경관을 훼손하고 조망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부정적 요소도 큰 만큼 건축 허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고달순기자

경제부지사에 정만호 전 靑 비서관 내정

최지사 민주당 도당 추천 수용 文캠프 광화문委 부위원장 활동

공석인 도 경제부지사에 양구 출신 정만호(58·사진)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최근 정 전 비서관을 도 경제부지사로 공식 추천했으며 최문순 지사는 8일 오전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도당의 요청을 수용했다.

정 내정자는 고려대 경제학과와 명지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국제부장, 사회부장 등을 역임한 뒤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10년에는 민주당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올해 5·9대 선에서는 민주당 선거캠프 광화문위



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도당 측은 정 내정자가 새 정부 내에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만큼 도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신설되는 올림픽 특보는 협치 차원에서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여러명이 활동하는 특보단 형태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도당이 추천한 구지열(원주)도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성현·원선영기자

경제부지사에 정만호 전 비서관 추천

민주당 도당, 공석 인사 논의

요직·기업재직 경험 능력 강조

최 지사 귀국 후 임명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공석인 경제부지사에 양구 출신 정만호(사진) 전 청와대 비서관을 추천, 최종 임명 여부가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정만호 전 비서관을 지난 4월 맹성규 전 부지사 퇴임 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도경제부지사로 추천했다.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책상황비서관 등을 지낸 참여정부 출신 인사다. 지난 대선캠



프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의 공간배치를 논의하는 광화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도당은 도 출신이자 청와대 요직경험이 있

는 정 전 비서관이 도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도에 추천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기업재직 경험이 있어 경제부지사에 필요한 소통과 경영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출장중인 최문순 지사가 귀국하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도당은 늦어지고 있는 특보인선문제도 재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당은 올해 초 정책과 정무, 문화, 올림픽, 청년 등 5개 분야의 특보 후보로 당내 주요 인사들을 추천했다. 이후 도와 의견을 조율해 왔으나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연돼 왔다. 도당 관계자는 “경제부지사를 시작으로 특보를 비롯한 다른 인사문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b.net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1년 반 만에 0%대 벽을 넘어 1.1%의 '깜짝 성장'을 했다. 1등 공신은 건설투자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건설투자(1.1%포인트)가 수출(0.9%포인트)과 설비투자(0.4%포인트)를 앞질렀다. 건설투자는 지난해에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건설투자(성장을 10.7%, 성장기여도 1.6%포인트)가 없었다면 경기 침체 속에 2.8% 성장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박수보다 아우 소리가 더 크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10.2)가 전 산업 평균(8.7)보다 월등한데도 '인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약속이 없다. 2020년까지 SOC 예산은 매년 6%씩 깎인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인프라 투자는 매년 뒷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엔 건설 정도와 관행이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4년 전 경기도회 간사를 시작으로 18·19대 경기도회장 등 오랜 기간 협회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유 회장을 만났다.



올해 건설 70년... '미래 70년' 여는 재도약 원년 될 것

유주현 회장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걸 안다"며 "올해는 근대적 개념의 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70주년이자, 새로운 70년을 시작하기 위한 건설산업 재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0일 동안 유 회장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찾아 건설업계의 산적한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직접 만난 국회의원만 30명이 넘는다.

유 회장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내건 간판 공약인 '적정 공사비 확보'와 '새로운 건설시장 발굴'이다. 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7개 단체는 지난달 낙찰률 10% 상한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건설산업계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치권 등에 제출했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부기관에 의뢰해 적정 공사비와 왜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신시장 발굴은 지역 노후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협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신규·노후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하는 1년짜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유 회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처럼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위주의 협업 운영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에는 손사래를 쳤다. 유 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에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입찰의 낙찰률 상한 조정안이 포함돼 있고 대행사들의 입찰참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도 협회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장 자문기구로 대기업 회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대기업 정책위원회'도 신설했다.

유 회장은 또 "중소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원과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완화하되 입찰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새로운 시대조류에 걸맞게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주도하는 협회로,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별써 취임 100일이다.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을 요즘 실감하고 있다. 임기의 10분의이 지난 셈이다. 취임 직후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모래채취 중단 문제로 정진 없었고, 지난주에는 이포카(IFAWPCA·아시아 서태평양지역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한 국제회를 치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다음달에는 건설산업 70주년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국회 상대로는 공적(제도 개선 건의)보다 수비(불합리한 개정안 방어)하는 일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인사각만사'라는 데 여전히 인사가 제일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매년 10조원 규모로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한다는 정책이 가장 주목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예산(1500억원)의 66배가 넘는 금액이며 올해 SOC 전체 예산(21조 8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향후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투자로 국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건설업에

국회·정부부처 찾아 건설업계 현안·제도개선 위해 온힘 다해

공공공사 할수록 적자업체 속출 외부기관에 의뢰해 적정공사비 '왜' 필요한지 객관적 검증 추진

신시장 발굴 '노후 인프라' 집중 권역별 프로젝트 직접 찾아나서

건설 없이는 4차산업혁명 불가능 시대 변화 흐름 주도하는 협회로...

회원사에 도움 되는 조직 최우선

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재원 확보와 확실한 민간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협회장 선거 때 슬로건이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약속'이었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적정공사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지난 10년간 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08년 5.8%에서 2015년 0.6%로 추락했다. 특히 공공공사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체계와 입찰·계약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달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아직 실공사비와 괴리가 있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300억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적용에서 배제하고, 적격·종합심사제의 낙찰률을 10% 상한조정해야 한다. 발주자

책임의 공기연장 시간까지 지금도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총사비비 관리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강화, 종합-전문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은 왜곡된 건설시장 바로잡기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법상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등록자에 의한 '위장직영'이 만연해 건축물, 특히 서민 주거용 다중·다가구주택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건축주 직접 시공 기준을 연면적 85㎡(25평) 이하 등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 영업범위 제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건설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향후 업계와 협회,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TIF를 꾸려 건설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직접시공제 확대, 적정임금제 도입 등 서울시의 이른바 '3대책'에 대한 대응은.

2억~100억원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는 하자책임 불분명, 연계공종 비협조 등에 따른 공기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다. 법률 검토 등 다방면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입찰참여에 따른 과징금과 부정당첨자 제재에 이어 발주처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건설업계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입찰참여로 건설사들이 행사 및 행정 처분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당하면서 경영상 애로가 크다. 협회는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전문가 용역을 거쳐 건설산업에 맞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에서도 SOC 예산 감축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OC 투자가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3500억원의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약 0.06%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협회는 SOC 투자 필요성을 지속 제기할 계획이다. 또 교통 SOC 시설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내년 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유지를 추진하겠다.

올해는 근대적 개념의 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70년이다.

70년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그 자체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터닝포인트다. 미래사회를 바꿔 나갈 4차 산업혁명도 건설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보틱스, 드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신사업 발굴과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새 시장을 열어가길 바란다.

글·김태형기자 kth@
사진·안윤수기자 ays7@